

굶기거나 때려 사망…못된 아빠들 실형

생후 11개월과 8개월 된 아이를 칭얼댄다며 시끄럽다고 때리거나 심하게 훈들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동학(아동학대치자) 등 혐의로 기소된 윤도(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11개월된 아이가 음식을 달리고 칭얼대자 시끄럽다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C방을 다니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3명의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식사나 용변 등을 쟁여주지 않고 방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의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며 윤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랑하기 전 배가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는 등 건강 악화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겨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당시 4세, 2세, 생후 11개월 된 아이들을 방지하고 기초적인 의식이나 병원 치료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모인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윤씨의 폭행을 저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8개월 된 아이가 탄 유모차를 강하게 훈들고, 울음을 그지 않자 두 팔로 인아 수지례 훈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동학(아동학대치자) 혐의로 기소된 김보(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 동거녀 외의 사이에서 낳은 8개월 된 아이가 탄 유모차를 앞뒤로 심하게 훈들고 집에서 깨울음을 터진 아이를 양팔로 잡고 위아래로 수회 강하고 빠르게 훈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유모차를 훈들 것으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고 아이를 안고 위아래로 훈든 것은 짐을 재우기 위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유모차를 훈

칭얼대는 아이 폭행해 사망케한 父 징역 12년 우는 아이 훈들다 떨어뜨린 父 징역 3년6개월

들어 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아이를 두 팔로 안고 강하게 훈들다가 떨어뜨린 일련의 행위를 학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모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분 동안 23회에

걸쳐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훈들면서 아이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렸고 이는 아이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훈들어 머리 뒷부분까지 들

어울리는 과정에서 놓칠 위험이 있는 등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비행기 놀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모차를 심하게 훈들고 아이를 심하게 훈들다가 추락시킨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스



컬링장으로 변신한 공항 입국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동계 스포츠의 열풍이 불며 패럴림픽을 넘겨두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입국장 바닥에 부착된 컬링장 그림 위로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인권위 “초등학교 교과서, 직업 차별적 표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해 초·중등 교과서에서 발견된 차별적 표현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현재 적용된 교과서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화하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 등이 담겨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적

됐다. 인권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 교과서에 사용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방관, 경찰관, 미용사 등은 아저씨나 아주머니로 지칭된 데 비해 의사는 ‘선생님’으로 지칭됐다”며 “직업에 대해서는 소방관, 의사 등 중립적 사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적 차원

의 접근이 아닌 권리적 관점의 해결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측은 “기존 교과서에) 학교폭력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치밀하게 점검해 문제점을 찾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침 등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국가안전대진단 4월13일까지 2주 연장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13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해안부는 위험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2월5일부터 8월30

일까지 시행하려던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소형병원,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6만여개의 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4개월간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김진기(국내 혼잡화장실, 미리 미리 진전 막으세요)

제작자는 김진기(국내 혼잡화장실, 미리 미리 진전 막으세요)